

[오피니언]

다산포럼

민병욱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의 '청록집'(1946년 출간)은 한국시사(韓國詩史)에 한 획을 그은 시집이다. 일제에 빼앗겼다 되찾은 모국에 향토적 서정미와 민족전통을 실어 내놓아 '말려붙은 계례의 심정을 적색준(김춘수)' 단비라는 평가를 받았다. 세작년 시집 발간 6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유종호도 '청록집'은 우리 문학의 정전증 하나"라며 "고향과 자연, 행복을 분리하지 않은 청록과 세 시인의 작업은 지금 우리가 새롭게 음미해야 할 대목"이라고 친미한 바 있다.

해방 후 처음 나온 본격 시집으로 매진을 거듭했던 그 책은 그러나 비단도 적잖게 받았다. 주장만 가득한 구호(口號) 시를 즐겨 쓴 이들이 선봉에 섰다. 그들은 조지훈과 박목월이 일찍이 편지로 시를 교환해 농하며 기다들은 저 유명한 시구(詩句)를 걸고 넘어졌다. '길은 와줄기/ 남도 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박목월? '나그네' 일부)과 '나그네

긴소매 꽃잎에 젖어/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놀이여'(조지훈? '완화삼' 일부)를 들먹이며 "지금 인민들은 독립을 달라, 쌀을 달라 아우성인데 밀주가 익는 강마을이나 찾아다니는 시인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며 소리를 높였다.

책의 수난과 분반(噴飯)할 일

고통 받고 억압 받는 시기, 민중의 삶을 외면한 생활이 없는 시란 얘기였다. 딱딱한 구호성 이념에 젖은 그들에겐 술과 강과 노들을 노래한 시인이 시대의식도 없고 그저 밀주에 취해 쏘다니는 한탕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그런 시人が 인민들에게 입한다면 인민 또한 의식도, 목적도 없이 허허롭게 사는 삶에 안주하고 말 것이라며 걱정했을 법도 하다.

주로 좌익시단에서 그런 비난이 거세지

자 조지훈은 마침내 한마디를 쏘아붙였다. "참으로 분반(噴飯)하였다." 입속에 든 밥을 내뱉은 정도로 터져 나오는 옷을 참지 못하겠다는 말이다. 시를 시로 읽지 않고 이념이나 목적에 끼워 맞추려고 같은 주장은 해대는 행태에 혀웃을 위해 무슨 대꾸가 필요하나는 거였다. 그러면서 그는 "전쟁 중에도 아기는 태어나듯 암흑의 계절에도 방랑은 있다"며 생활을 정치적 경제적이나 물질적인 것으로만 재단하려는 비판자들을 몰아쳤다.

'청록집' 후 60여년이 지났다. 그런 요즘, 참으로 분반할 일이 민주화한 나라 대

한민국에서 벼젓이 벌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책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 장병들의 접근을 통제한다는 애기다. 불온서적 중에는 출간 후 50만권이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소설과 세계적 석학과 각종 독서단체가 추천한 필독서도 포함돼 논란을 증폭시킨다. 작가 현기영의 '지상에 순기력 하나'와 석학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 인들' 등이 그런 책들이다.

국방부는 반정부 반미(反美) 반자본주의적 시각에서 쓴 책이나 북한 찬양 서적을 장병들로부터 차단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 과연 그 책들이 그러하냐는 차치하고 보자. 그렇더라도 60년 전 좌익시인들이 청록파에게 같은 구호를 외치지 않느냐고, 자기들의 가치에 동화되지 않느냐고 비난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을 하나의 시각으로만 보고 남들마저 그 그 속에 가두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 행태를 어찌해야 좋을까. 현기영이 오죽하면 "도대체 지금 내가 어디에 살고 있으신가?"라며 손웃음을 지었겠는가.

장병 금서(禁書) 명단이 보도된 뒤 그 책들의 판매량이 갑자기 늘어난 건 또 한번 분반할 일이다. 그러잖아도 OECD 국가 중 국민 독서율이 가장 낮다는 오명을 들는 우리나라니 이렇게라도 책 판매가 느는 걸 좋아해야 할까. 아니면 상당수 유명작가들이 왜 내 책은 불온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느냐고 불온소리를 하는 현실을 깊이 웃어야 할까. 삼키기도 전에 밥을 모두 뺏어내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할 텐데...

〈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수돗물 '민간위탁' 끝내 강행할 것인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상수도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수도사업 구조를 바꾼다고 한다. 수돗물 서비스 개선과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위탁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적영하고 있는 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해 수자원공사나 환경시설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도사업의 소유권은 지자체나 정부가 갖되 경영만 민간에 맡긴다는 것이다. 배관이나 정수 등 상수도 사업도 민간에 이웃소싱할 방침이다.

하지만 광주시 등 지자체의 반발은 심각하다. 우선 민간위탁을 민영화의 전 단계로 의심하고 있다. 민영화가 현실화되면 이운 추구가 목적인 민간기업의 특성상 수돗물 가격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서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이 공급하는 수돗물을 맛

산원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광주는 현재 t당 생산원가 602원보다 74원 짜리 528원, 전남은 생산원가 952.4원보다 244.4원 낮은 708원에 공급하고 있다. 민간기업으로 넘어가면 도시보다는 농촌,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의 수돗물값 인상 폭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별 운영에 따른 형세와 비효율, 중복부자, 주민 불신 등 수돗물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물론 수돗물의 민간위탁에 대한 부딪쳐 다시 국유화하고 있는 외국 사례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수돗물의 민간위탁은 신중해야 한다. 정부도 지난 6월 수도사업의 민간지분 소유를 허용한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 예고하려다가 연기한 적이 있다. 정부는 수돗물이 '경제재'가 아닌 '공공재'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배’보다 ‘배꼽’이 큰 농축산물 유통구조

농축산물의 유통구조가 심각히 왜곡돼 있다고 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난해 42개 주요 농축산물의 유통경로를 주목한 결과, 판매가격에서 농가의 뜻은 44%인 반면 56%는 유통비용이라는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큰 한심한 꼴이 아닐 수 없다.

품목별 편차는 극심하다. 배추·무 등 업근 채소류의 유통비용이 70.7%로 가장 높고 고추·마늘 등 양념 채소류 61.6%, 장미·국화 등 화훼류 57.7%, 쌀·콩·감자 등 식량작물 55.3%, 사과·배·포도 등 과일류 53.3%,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 40.7% 등이다.

이런 유통구조 아래선 유통 및 판매업자의 배만 불리게 된다. 복잡한 유통구조를 거치다보니 가격에 거품이 생겨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농가는 농가대로 생산비도 견지기 힘들다면 아무성이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농축산물 물가가 비싸다고 하소연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왜곡된 유통구조를 방지해선 안 된다. 유통 단계별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직거래 장터의 상설화도 확대해야 한다. 유통단계에서 거품을 걷어내지 못하면 농민과 소비자의 피해는 막을 수 없다.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해묵은 과제다. 역대 정부마다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농축산물의 복잡한 유통과정 때문에 농민과 소비자가 아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왜곡된 유통구조를 방지해선 안 된다. 유통 단계별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직거래 장터의 상설화도 확대해야 한다. 유통단계에서 거품을 걷어내지 못하면 농민과 소비자의 피해는 막을 수 없다.

無等鼓

지난 22일 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15.68포인트(1.04%) 내린 1,496.91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1,5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해 4월10일 이후 1년4개월여 만에 처음이었다. 주락의 이유는 국제유가 급등과 외국인 매도 때문이었다.

거의 모든 종목이 내리면서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었지만, 늘 그렇듯 하락장에서도 상승세를 구가하며 재미를 본 종목도 있었다. KT,

가스공사, 기아차 등이 강세를 보였고 한국기술산업은 무려 12.7%까지 급등하면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한국기술산업은 바이오디젤을 비롯해 너지 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이 회사의 '오일 샌드(Oil Sand)' 시험생산 예정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치솟았다.

뉴욕증시에서도 최근 '오일 샌드'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18일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이 캐나다 알버타주를 방문하자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는데, 모두 오일 샌드 관련주

식이었다. 오일 샌드 생산 예정인 현장을 단지 함께 둘러본 것 뿐인데 주가가 무작정 올랐고 보다 못해 그들은 결국 '투자계획이 없다'고 진정시켰다. 버핏은 "영화관에 간다고 영화관련 기업을 사들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두말할 것 없이 관련주가는 원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다.

오일 샌드는 중질원유를 함유하고 있는 모래나 사암(沙岩)을 말한다. 석탄을 채굴하듯이 노천광산에서 오일 샌드를 캐 파쇄기로 분쇄한 뒤 오일을 추출하거나 생산

점에 뜨거운 증기로 주입해 석유성분을 녹인 후 뽑아내는 방식으로 원유를 생산한다.

베네수엘라와 캐나다, 미국 등에 많이 매장돼 있는데 생산비

율이 높고 경제성이 없어 기업들이 과거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유가가 치솟으면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당장은 투자를 부인했지만 세계 경제의 미래를 창조하는 이들 선각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기호 경제부장 kihh@kwangju.co.kr



아기사슴 담비의 휴식



이릴 적 '아기 사슴 담비' 이야기를 무척 감명 깊게 읽었다. 어미를 잃은 담비가 엄마를 찾아 떠나는 기나긴 여정을 그린 모험 동화다. 그 당시 정말 새끼 사슴은 무조건 예쁘다는 인식이 강하게 심어졌다. 그리고 동물원에 와서 해마다 그 예쁜 새끼 사슴들을 무려 5마리 이상씩, 원없이 보게 되었다.

담비 이야기에서 보면 사슴이 모험심 많고 다른 동물들과 잘 어울리는 동물로 묘사되지만, 사실 사슴같이 소심한 동물도 없을 것이다. 여러 사슴들을 섞어 놓아도 끼리끼리 뭉치지 결코 다른 종들과 섞이지 않는 녀석들이 바로 이 녀석들이다.

새끼들이 귀여운 건, 외모뿐만 아니라 한달 정도 지나면 윗장난을 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이

▲ 최종욱 광주수자원공사 수의사 lovnat@hanmail.net

유령집회 신고, 제재 대책 마련해야

관공서나 학교, 회사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1인 시위' 장면을 흔히 본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억울함과 주장을 펼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그런데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유령집회 신고는 주로 힘있는 기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협약법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A업체의 횡포를 항의하기 위해 회사 앞에 B공간에서 시위를 하고자 하는 흥길동이라는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를 하는 게 합법적인 절차이다. 그런데 이를 막기 위해 A업체는 자신들이 고용한 유령 신고자들을 앞세워 먼저 B공간의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흥길동 등은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 김기원·광주시 서구 세하동

지역농산물 수도권 판촉 후 지자체·농협이 보증을

며칠 전 경기도 수원에 갔다가 반가운 장면을 목격했다. 가족들과 함께 한 음식점에 갔는데 그 식당에 '쌀 사랑·농촌 사랑 후원의 집'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전북 쌀을 이용하는 식당에는 그 액자를 걸어주고 우리 쌀을 이용하는 업소임을 전복 농협이 보증하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농협과 힘을 합쳐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쌀을 대도시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의 판촉활동을 건의한다. 원산지표시제가 있지

만 음식점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 농협이 이렇게 보증을 하면 소비자들은 믿을 것이고 매출도 늘 것이다 아닌가. 농민들은 쌀의 확실한 판로가 생기니 일석이조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수입 쌀이 어디로 흘러들어가 팔리고 있는지를 정도로 주변 음식점 등에서 수입쌀을 사용하고 있다는 곳은 군데군데 보지 못했다. 전북 농협의 사례처럼 우리 광주·전남 자체체와 농협에서도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 김인수·광주 북구 북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금로 220-2(우편번호 501-711)	편집국장 申港澤	편집국장 申港澤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FAX 222-4918 (F A X 227-0118)	사 회 2 부 2200-619	경 영 지 원 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면 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F A X 227-8005)	(F A X 222-8005)
정 치 부 2200-616 여론문화체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651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서 울 지 사 02-773-9335	디자인 2200-536
(F A X 222-4267)	본지은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요를 준수합니다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